

01

FTA 포커스

2026년도 관세청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2026년도 관세청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1. 들어가며

2026년 1월 23일,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관세행정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바로 '국제 관세의 날'이다. '국제 관세의 날(1월 26일)' 즈음이 되면 세계관세기구(WCO)를 위시해 전세계 관세청에서는 각각 그 해의 의미 있는 슬로건을 세우고 관세행정의 의미를 기념한다. 금년의 우리 관세청 비전은 '시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었다. 이 날 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비롯한 57개국 주한 대사관 대표들과 주요 무역관련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많은 귀빈들을 모시고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만감이 교차했다. 문득 24년 전 '국제 관세의 날' 개최를 준비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당시 차장님께서서는 행사에 몇 나라 정도가 참여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는데 당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던 참석자 수는 열 명이였다.

그래도 국제행사인데 참석자가 열 명도 안되면 모양이 너무 안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이셨다. 초청장을 보내고 열심히 전화기를 돌린 후 받아든 결과는 딱 10개 대사관이었다. 그래도 목표는 채웠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행사를 며칠 앞두고 대사관 두 곳에서 불참 통보를 해왔다. 그냥 취소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낸 초청장에 응하신 손님들이 여전히 있는데 부족하나마 계획된대로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조출한 회의실에서 현수막을 걸고 행사를 진행하고, 부산세관의 협조를 받아 감시정 시험운행도 경험하면서 여덟 분의 손님과 함께 행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 후 24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관세청의 위상은 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57개 대사관에서 대표를 보내오고 그 중 30개국에서는 대사님이 직접 참석하신 것이다. 미국 관세청(CBP),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부(DHS)와 유럽, 중국, 일본 대사관 등 주요 국가도 상당수 참석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장님과 인사를 나누려고 나아오고 기념 촬영도 한다. 국제협력국장인 필자에게도 하나같이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어서 덩달아 기분이 으쓱해졌다.

2025년 수출입 금액(잠정)은 각각 7,097억달러, 6,317억 달러로 2002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었고, 수출입 건수는 2002년에 각각 145만건, 155만건 정도이던 것이 지금은 수출 1,100만건, 수입 1억 4천만여건으로 폭증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된 FTA 경제영토는 2026년 3월 현재 22건의 FTA 5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을 아니다. 25년 전의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볼 때 '마약범죄 확산기'로 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WTO의 자유무역 기조와 FTA의 확산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EU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이러한 자유무역 기조에 대한 브레이크에 힘을 더하고 있다. AI 확산과 발전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파고는 관세행정에도 정면으로 다가왔다. 2004년에 처음 인터넷 통관시스템을 개통했을 때의 감동은 이제 S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완전히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관세행정에 제시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하에서는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새로운 무역규범의 등장으로 국제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통상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원산지 협력 및 검증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해 왔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세행정 관련 규범과 국제표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과 선진 관세행정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였고, 20년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의장을 맡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역원활화 등 글로벌 통상 이슈 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형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체계의 WCO 국제표준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신 통상질서에 대한 대응, 수출기업의 시장 확대 지원, 국제 관세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그리고 AI·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II. 2025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지난해 국제관세협력국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미 수출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해당 T/F는 관세청장 주관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로 격상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하여

기업들에 제공하였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대미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가이드와 사례, 품목분류 정보 등을 신속히 입수·분석하여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통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하였다.



SCCP 전체회의 (출처 : <https://apec2025.kr/kor>)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개최와 관련하여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의장국으로서 두 차례 총회와 여러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AI 관세행정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세행정 역량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기반 관세행정의 기여’ 등 SSCP의 주요 성과를 APEC 정상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글로벌 사우스 국가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수출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기술이 WCO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이끌고, 전자상거래 혁신사례를 회원국에 전파함으로써 디지털 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K-푸드·뷰티 및 재활용품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기획 검증을 통해 약 250억 원 상당의 부당 특혜 적용을 차단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축적된 원산지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국과 원산지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 보다 유리한 FTA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 수요와 연계한 집합·화상·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 통계, 동향, 위반사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검증 대응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III.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추진방향

지난해 하반기 관세청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관세행정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있다. 새로운 비전에서 'AI'는 기술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관세행정 전 영역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또한 '공정성장'은 기회와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도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1. 신 통상질서에 효과적 대응

가. 미국 관세대응 지원체계 고도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검증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뿐만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CBP의 비특혜 원산지 검증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단'을 구성하여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와 산업·품목별 판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EU CBAM 대응역량 강화 지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에 시범운영 하였고, 올해 해당 프로그램을 모든 기업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기업이 CBAM 적용대상 물품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 수출기업의 시장확대 및 다변화 지원

가.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기존의 관세청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및 수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뷰티·푸드 등 새로운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FTA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제도를 제도화하여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스스로 원산지관리 요건을 점검하도록 하는 자율·책임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종이 기반 C/O 중심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기반의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고, 일부 항목 정정 시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나. 수출 촉진을 위한 FTA 이행협력 및 협상 전개

FTA 협상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조항을 관철하고,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상대 관세당국과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수출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 글로벌사우스 국가 등과의 FTA 협상에 정부대표단(통관·원산지 분과)으로 참여하여 인증수출자 제도 및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도 도입, 사전심사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조항의 도입을 노력하고, 아세안, 중국과 상호협력 네트워크 및 회의체를 구성하여 FTA 이행 현안 발생 시 현재 공식 FTA 위원회를 통한 합의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관세청 주도 실무협의로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검증 제도 개선

기업의 자발적 원산지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해 특혜 규모가 큰 기업의 원산지규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원산지 정기검증(업체단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협정적용 규모’인 대상 업체 선별을 ‘협정적용 규모 + 위험성 평가’로 정교화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또한, 현재 수출입기업에게 수출 원산지검증 위반 품목 및 사유만 공개하던 것을 수입검증 위반 정보까지 추가로 공개하고 위험정보 모니터링 결과도 적극 공개하여 선제적인 원산지검증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 예방적 원산지 기획 검증으로 K-산업 보호

국산가장 수출로 인한 국가신인도 훼손 방지를 위해 우회수출 위험품목에 대한 사전점검 차원의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미국 중심의 특혜 원산지검증을 EU로 확대하고, 미국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정책을 반영해 비특혜 기획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세율 농축수산물과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해 위험분석 데이터 툴, 분석 챗봇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단계적 관세 인하·철폐 물품은 가급적 인하·철폐 초기에 검증하여 검증대상 기간 누락에 따른 고액 추징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마.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시장개척 지원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국 관세당국과의 분쟁 발생 시 그간 관세청이 쌓아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규제 강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 조선, 자동차, 화장품 등의 산업군을 위주로 수출입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해외 관세동향 수집·전파 등 해외정보 공유 확대 및 통관애로 해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회의, 주한 대사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주요 산업협회 정례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국제관세 사회 영향력 확대

가. WCO 고위급 진출 기반 마련

국제기구에 고위급이 진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국위선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에 관세분야 최고 국제기구인 WCO 고위급 진출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 발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관세청은 WCO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 예상 공석 직위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과거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외교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며, 관세청 후보자를 국제관세의 날, 고위급 무역 원활화 세미나 등 관세청 주관 각종 국제행사 및 WCO 회의, 다양한 양자·다자 면담 등과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후보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겠다.

나. K-관세행정으로 국제표준 선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WCO 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규범의 정립 주도가 필요함에 따라, 관세청 주도로 2025년도에 마련한 WCO e-C/O 국제표준을 한-아세안 EODES 구축에 활용하여 확산시키고, WCO 과학소위, HS 검토소위, 전자상거래 표준 회의 등 WCO 내 주요 회의체에 의장직 진출을 추진하여 분야별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다. 체계적·실용적 관세 외교 전개

글로벌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관세당국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짐에 따라 실용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점 국제협력 현안 해결을 노력하고,

관세당국 최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2026년도 APEC SCCP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외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초국가범죄와 관련한 주요 국가 중 세관상호지원협정 미체결국가, 체결 후 장기간이 경과한 국가를 중심으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개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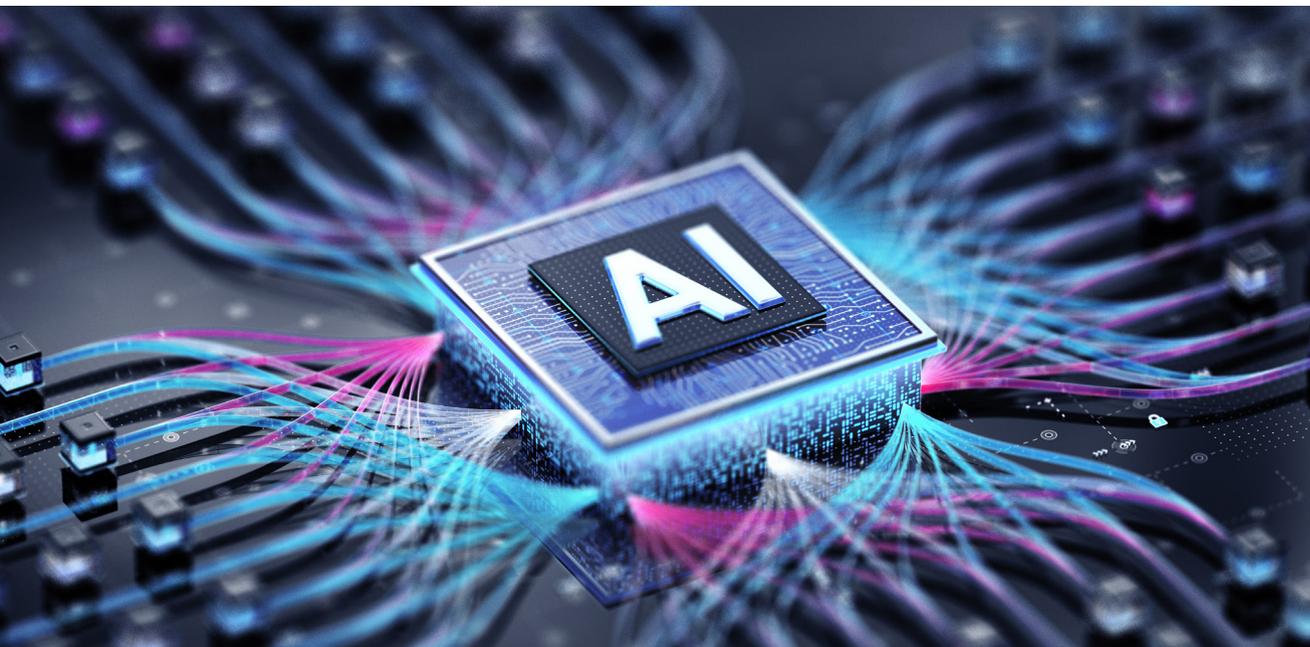
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사업 시행

WCO-국내대학-관세청 공동으로 데이터분석 분야에 대한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한국형 데이터분석 모델을 세계에 전파하고, 개도국 대상 관세청 자체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원스탑원산지관리시스템(OOMS, 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을 최초로 해외에 보급 중인 '튀니지-탄자니아 사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차기 사업 후보국도 발굴하겠다.

4. AI·데이터 기반 업무역량 강화

가. WCO 자료 검색 AI 시스템 구축 및 회원국 확산

WCO 홈페이지에 WCO의 다양한 정책 및 논의 자료가 영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많고 언어적 문제도 있어 자료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회의록, 보고서,



발언문과 같이 WCO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를 AI에게 학습시켜 사용자 질문에 정확한 요약과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국어 지원 기능을 탑재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한 후 WCO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회원국에 시스템 사용을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리더십과 WCO 내 공헌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K-관세인 양성

지속적 혁신과 국제협력 결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관세청의 미래인재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국제 인재 선발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WCO의 '인증교관 선발' 프로그램인 기획, 토론, 발표 위주 커리큘럼을 대폭 반영하여 관세청 후보자가 WCO 인증교관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WCO의 품목분류, 분석분야 인증교관 선발 워크숍을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 후보자가 선발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회의·행사, 능력배양사업 참여를 통해 관세청 국제인재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이들이 WCO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IV. 맺음말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행정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은 이러한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년도 관세청 국제협력 정책은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FTA 활용 편의 제고와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와 K-관세행정 모델 확산을 통해 국제 관세표준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AI와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통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관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미래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자 한다.

2026년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도약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국제협력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